

[서식 예]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

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○○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피보전권리의 내용 20○○. ○. ○. 약정에 의한 선박인도청구권

목적물의 가격 ○○○원

신 청 취 지

1.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 2.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○○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.
 3. 채무자는 위 선박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 4.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당사자들의 지위

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매수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으로서 목록 선박의 소유자입니다.

2. 채무자의 선박인도의무

채무자는 2000. 0. 0. 채권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2000. 0. 00.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위 선박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

3. 보전의 필요성

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위 선박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놓았으나 채무자가 위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제3자의 점유하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4. 담보제공

한편, 이 사건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명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|
| 1. 소갑 제1호증 | 계약서 |
| 1. 소갑 제2호증 | 소장사본 |
| 1. 소갑 제3호증 | 최고서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소명방법 | 각 1통 |
| 1. 정박증명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00. 0. 0.

위 채권자 000 (서명 또는 날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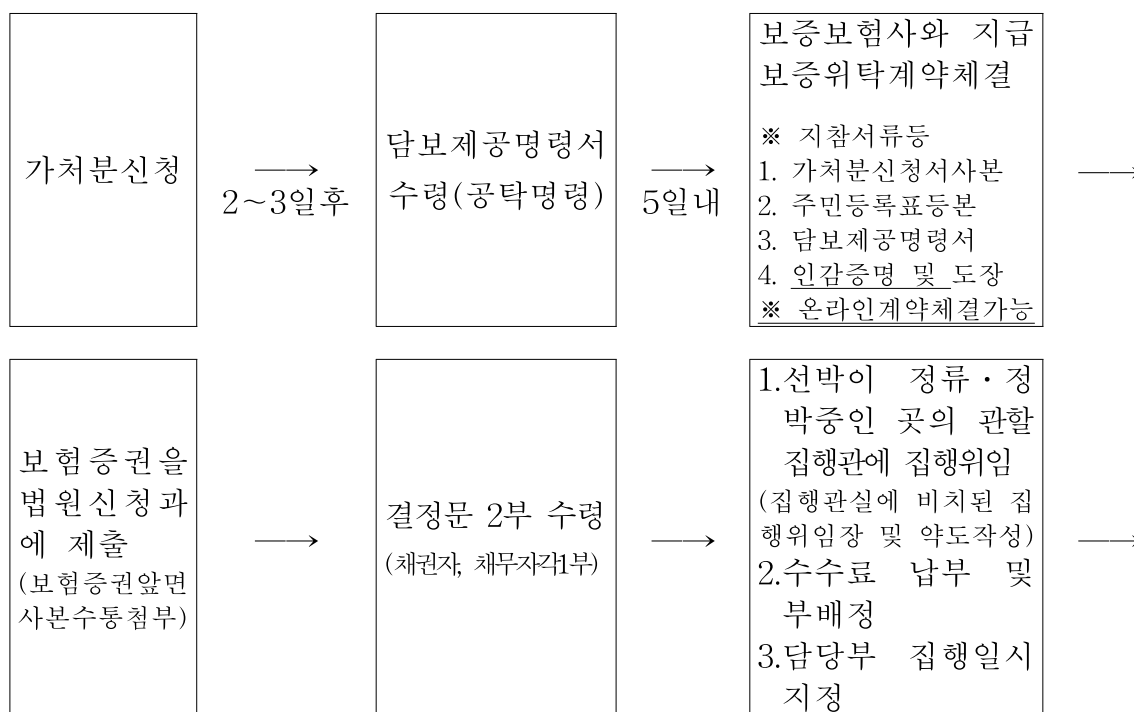
[별 지]

선박의 표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선박의 종류 및 명칭 | 기선 ○○호 |
| 1. 선 질 | 철강 및 목조 |
| 1. 총톤수 | ○○○톤 |
| 1. 순톤수 | ○○○톤 |
| 1. 기관종류 및 수 | 디젤기관○개 |
| 1. 추진기의 종류 및 수 | 나선추진기○개 |
| 1. 진수연월일 | 20○○. ○. ○. |
| 1. 정박항 | ○○항 |
| 1. 소유자 | ◇◇◇◇ |
| 1. 선장의 이름 | ◆◆◆◆ |
| |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. 끝. |

제 출 법 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		
제 출 부 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도 첨부)	관 련 법 규	민사집행법 제300조
불복 절차 및 기간	<p>(채권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 <p>(채무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·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 		
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		

※ 집행절차



1.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
2. 집행관 공시서부착
3. 집행관 집행조서작성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